일본 자민당정권의 중국정책과 관계정상화, 1971-1978

- 중국경사의 국내정치과정 -

서승원*
sw_suh@korea.ac.kr

Contents

Ⅰ. 들어가는 말
Ⅱ. 관계정상화와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
  1. 다나카 방중과 중일공동성명
  2. 경제·실무협정, 그리고 중일평화우호조약
Ⅲ. 일본의 중국정책과 현상유지적 대외정책 간의 함수
  1. 정부 내 정책결정과 관료적 적응
  2. 자민당 내 친중파와 친타이완파의 대결
  3. 친중연합의 확대, 그리고 중국경사
Ⅳ. 맺는 말

Abstract

日中共同声明、様々な経済・実務協定、そして日中平和友好条約など、1970年代の日中関係は宿願の関係正常化の一途を辿った。そのプロセスの中でとりわけ際立ったのは日本政府、政界、経済界、そして国民世論を横断する急速な「中国傾斜」であった。しかしながら、既存研究は、米中接近といった国際環境要因、日中間の外交交渉などに主な関心をもち、中国傾斜をもたらした国内政治的要因、内閣ごとの中国政策の変容、そして国内の諸アクター間の関係について十分考慮しなかった。本論文では、前述の共同声明、諸経済協定、そして平和友好条約の事例を分析し、田中角栄、三木武夫、そして福田赳夫内閣における中国政策のあり方を明らかにしたい。結論からいうと、1970年代における自民党政権の中国政策は、戦後外交の根本的な転換というよりは、従来の中国問題についての政策運営方式が中国に応用・適用された側面が非常に強かった。そしてその具体的な政策運営を規定したのは、他ならぬ国内政治であった。政府内政策決定の官僚的適応、与党内における親中派と親台湾派の対決、そして野党、経済界、国民世論に跨る幅広い中国ブームがそれで

* 고려대학교 교수. 일본정치·외교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공.
유익한 코멘트를 주신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ある。その結果、この時期の中国政策というのは、新しい政策目標やビジョンを打ち出さず、対米自主外交への願望、対中経済関係への期待、反軍国主義感情などの受け皿と化したのである。

Key Words : 1970年代日中関係、中国傾斜、自民党政権、日中共同声明、日中平和友好条約、親中派と親台湾派
(Japan-China Relations in 1970s, Pro-Chinese Sentiments,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Japan-China Diplomatic Normalization, Japan-China Peace and Frendship Treaty, Pro-Chinese Faction and Pro-Taiwanese Faction)

Ⅰ. 들어가는 말

중일문제는 외교문제라기 보다는 국내문제이다. 메이지(明治)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어떠한 내각에 있어서도 최대의 난문(難問)이었다. 중일문제가 국내문제로서 커다란 암적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중일문제가 진정되면 국내 불협화음 가운데 3분의 2는 없어질 것이다.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회고록)[1)]

1970년대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1971년 가을 중화민국(이하 타이완)을 밀어내고 유엔회원국 및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1972년 2월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교전국 미국과 역사적 화해를 이루었다.[2)] 곧이어 같은 해 9월에는 구 적국 일본과 전격적인 국교정상화를 달성하였다. 그 대미를 장식한 것이 1978-9년의 개혁·개방노선, 중일평화우호조약, 그리고 미중국교정상화였다. 중일관계로 눈을 돌려보면 1970년대는 중일공동성명(1972.9), 각종 경제·실무협정, 중일평화우호조약(1978.8)이 체결되어 쌍무적 관계의 법적·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이른바 '1972년 체제').[3)] 이 과정에서

1) 早坂茂三(1987)『早坂茂三の「田中角栄」回想録』小学館, pp.220-221.
2)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대립을 이용하여 대(対)소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베트남전쟁의 원만한 종결을 기대하였다.
3) 1972년 체제란 국교정상화 이후에 형성된 중일관계의 기본 틀로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의 미일안보체제 용인, 중국의 전쟁배상 포기와 일본의 경제협력, 지도자 간 체제의 차이를 넘어선 일중우호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国分良成(2001)「冷戦終結後の日中関係 : '1972年体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정부, 정계, 경제계, 국민여론을 망라한 급격한 '중국경사'(中国傾斜)가 그것이다. 부연하면 일본은 미국에 6년 앞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을 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우방국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여야당 의원들은 앞 다투어 중국을 방문했으며 경제계 또한 그에 뒤지지 않았다. 매스미디어와 여론에서는 '중국 붐'이 거세게 불었다. 일종의 정념(情念)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경사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자민당 정권은 어떻게 중국정책을 운영하였는가? 그 동안 국교정상화와 평화우호조약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4] 또한 최근에는 일본외교문서 공개로 그 사실관계가 자세히 밝혀지고 있다.[5] 하지만 기존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이들은 미중접근, 중소관계 등 국제환경 요인이 일본의 중국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를 공유하지만 무엇이 중국경사를 낳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또한 외교교섭에 주된 관심을 갖는 관계로 일본정부의 중국정책이 내각별로 어떻게 변용되는지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게다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계, 관료기구, 경제계, 사회단체 등 제반 행위자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명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1971년부터 1978년까지의 일련의 조약·협정 체결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의문에 답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制'の転換」『国際問題』第490号(1月), pp.42-56; 손기섭(2004) 「일중 정치경제 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일본연구논총』제19호, pp.93-128.

4) 대표적인 연구로 田中明彦(1991)『日中関係1945-1990』東京大学出版会; 緒方貞子(1992)『戦後日中・米中関係』東京大学出版会; 林代昭(1997)『戦後日中関係』柏書房; 吳学文·林連徳·徐之先(1995)『中日関係1945-1994』時事出版社; Haruhiro Fukui(1977). "Tanaka Goes to Peking: A Case Study in Foreign Policymaking." in T. J. Pempel (ed.) *Policymaking in Contemporary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84-90; Sadako Ogata(1988). *Normalization with China*. Tokyo: Nihon Keizai Shinbunsha; Allen S. Whiting(1989). *China Eyes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Yoshihide Soeya(1998). *Japan's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1945-1978*. Oxford: Clarendon Press; 손기섭(2003)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일본연구논총』제17호, pp.105-140 등이 있다.

5) 井上正也(2010)『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名古屋大学出版会, 李温民(2005)『日中平和友好条約交渉の政治過程』お茶の水書房.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70년대 일본 자민당정권의 중국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중일수교(타이완과의 단교) 등 급격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정책운영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관료적 적응'의 측면이 강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외교적으로 중일수교는 미일안보체제와의 정합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시되었고, '두 개의 중국'(중국과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도 수교의 상대를 바꾼 것 외에 근본적인 정책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 사회적 정서 및 욕구(대미자주외교, 대중경제관계, 반군국주의 등)는 여과되지 않은 채 분출되었다. 아래의 Ⅱ절에서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내각 시기의 중일공동성명과 각종 경제·실무협정, 그리고 미키 다케오(三木武夫)-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내각 시기의 중일평화우호조약을 둘러싼 양국 간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본의 중국정책의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어지는 Ⅲ절에서는 정부 내 정책결정과 자민당 내 정치과정, 그리고 사회적 정치과정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으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관계정상화와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

1. 다나카 방중과 중일공동성명

1972년 6월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지향하던 친미 성향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내각이 퇴진하였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다나카 내각(1972.7-1974.12)이었다. 다나카 수상은 취임 직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러 진행할 것"이란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제정세도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71년 가을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자 서방국가들이 연이어 중국을 승인하였다.[6] 곧이어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미 대통령의 중국방문 발표가 이어졌다(이른바 '닉슨쇼크').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며 사토 내각을 맹렬히 비난하던 중국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다나카 내각에 접근해 왔다.

6) 중국은 1970-2년에 일본을 비롯하여 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등 34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국 저우언라이(周恩来) 수상은 1972년 7월 일본 사회당(社会党) 사사키 고조(佐々木更三) 전 위원장을 통해 다나카 수상의 중국방문을 환영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다케이리 요시카츠(竹入義勝) 공명당(公明党) 위원장과의 회담에서는 공동성명안 8항목과 묵약사항 3항목을 제시하였다(이른바 '다케이리 메모').[7] 이 제안은 일본측으로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었다. 전쟁배상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중국·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을 용인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8] 이에 대해 일본이 치루어야 하는 대가는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 즉 타이완과의 관계 단절이었다.[9]

이에 다나카 내각은 9월 25일 중국을 방문하여 국교정상화 교섭(3박 4일)에 임하였다. 교섭의 쟁점은 네 가지였다. 첫째는 일본과 타이완 간의 일화평화조약(日華平和条約 1952.4) 문제였다. 중국 측은 일화평화조약이 불법·무효이며 중일 간 전쟁상태는 공동성명이 선언되는 날 종결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일본측은 일화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는 이미 종결되었으며 금번 국교정상화로 그 임무가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일본 측이 제시한 '전쟁상태'가 아

7) 다음은 공동성명안 8항목이다. ①전쟁상태는 공동성명이 공표되는 날 종료된다. ②일본정부는 중일국교회복 3원칙을 이해하며 중국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③국교수립은 양국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의 이익에도 합치된다. ④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 5원칙에 근거하여 양국 간 관계를 처리한다. ⑤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제3자의 패권추구에 반대한다. ⑥외교관계 수립 후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다. ⑦양국 인민의 우의(友誼)를 위해 중국은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⑧평화우호조약 체결 전에 통상, 항해, 기상, 어업, 우편, 과학기술 등 제반 협정을 체결한다. 다음은 묵약사항 3항목이다. ①타이완은 중국의 영토이며 타이완 해방은 내정문제이다. ②공동성명 발표 후 일본정부는 주타이완 대사관, 영사관을 철수시키며 타이완의 주일본 대사관, 영사관을 철수시킨다. ③타이완 해방 시 타이완에 있는 일본의 투자 및 기업에 대해 적절한 배려가 취해진다. 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2003)『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29-34.

8) 竹入義勝(2003)「歴史の歯車が回った流れ決めた周首相の判断」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200-203.

9) 중국은 1971년 6월 공명당(公明党)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일국교회복 3원칙'을 제시한 상태였다. ①중국은 단 하나이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중국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이다.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을 만드는 음모에 단호히 반대한다. ②타이완은 중국의 일개 성(省)이고 중국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타이완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다. '타이완 귀속 미정'론에 단호히 반대한다. ③일화평화조약은 불법이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중일 간 전쟁배상문제에 대해서는 殷燕軍(1996)의『中日戦争賠償問題』(お茶の水書房)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닌 '비정상적 상태'(제1항)라는 표현이 받아들여졌다.[10] 둘째, 최대 현안인 타이완문제는 일본 측이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항에 근거한 입장을 견지한다"(제3항)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미 일본은 법적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타이완을 포기한 상태이지만, 더 나아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임을 정치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일화평화조약에 대해서는 일본이 별도로 종료를 선언하는 방식이 취해졌다.[11]

셋째, 일본은 중국의 배상청구권 포기와 관련하여 '권'(権)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일화평화조약이 이미 청구권 포기를 규정하고 있었고, 또한 이를 표기하면 청구권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중국 측은 타이완이 배상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측의 견해에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결국 이 또한 받아들였다(제5항). 넷째, 당초 일본은 소련의 반발을 우려하여 '반패권(反覇権) 조항'을 공동성명에 삽입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반패권이 소련을 상정한 것은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는 일본의 제안대로 국교정상화가 "제3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제7항)는 내용이 삽입되었다. 9월 29일 일본의 다나카 수상, 오히라 외상, 중국의 저우언라이 수상, 지펑페이(姫鵬飛) 외교부장이 서명한 중일공동성명은 전쟁상태 종결과 일본의 전쟁책임·반성을 언급한 서문과 아래 9개 항목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12]

> ①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그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본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날 종료된다.
>
> ②일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
> ③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거듭 표명한다. 일본국 정부는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선언 제8항에 근거한 입장을 견지한다.

---

10) 橋本恕(2003)「橋本恕に聞く：日中国交正常化交渉」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221.

11) 교섭에서 중국은 일본이 앞으로도 타이완과 무역, 어업, 인적 왕래를 지속하는 것에 양해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두 개의 중국'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 타이완 독립운동을 지원하지 않을 것, 그리고 타이완에 대해 어떠한 야심도 품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12)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日中関係基本資料集 1970年-1992年』霞山会, pp.98-9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④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72년 9월 29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에 따라 각각의 수도에 상대국의 대사관 설치 및 그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사를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⑤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국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⑥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 및 호혜, 그리고 제반 평화공존 원칙의 기초 위에서 항구적인 평화우호관계를 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부는 이상의 제반 원칙 및 유엔헌장 원칙에 근거하여 일본국 및 중국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며 무력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호소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⑦중일 양국 간 국교정상화는 제3국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양국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 밖의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집단에 의한 기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⑧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 평화우호관계를 강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교섭을 행하기로 합의하였다.

⑨일본국 정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적 왕래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또한 기존의 민간협정도 고려하면서 무역, 해운, 항공, 어업 등 사항에 관한 협정 체결을 목적으로 한 교섭을 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일본 측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양보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교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노우에 마사야(井上正也)는 중국이 대일정책을 전환시킨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13] 첫째, 중소 국경충돌 이후 소련의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었으며 소련 또한 중일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대일접근을 꾀하고 있었다. 둘째, 장제스(蒋介石), 마오쩌둥(毛沢東), 저우언라이 등 중국, 타이완 공히 '하나의 중국'을 신봉해 온 노령의 혁명 1세대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셋째, 닉슨 방중과 미중공동성명(이른바 상하이커뮤니케)을 통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13) 井上正也(2010), pp.501-5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것이라는 언질을 확보한 중국은 일본-타이완 관계를 단절시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하여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을 주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하였다.[14]

부연하면 미중공동성명의 핵심은 '반패권 조항'에 있었다. "쌍방은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한 패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밖의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 의한 기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으로 명실상부한 반(反)소 통일전선을 의미하였다. 즉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베트남전쟁 해결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소련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고자 한 미국, 그리고 미국과 화해함으로써 타이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또한 소련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중국의 의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다.[15] 중국으로서는 미중접근의 연장선상에서 중일국교정상화를 파악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16]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교정상화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첫째, 중일 수교는 전후 일본외교의 최대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한국전쟁 중에 '중국봉쇄=일본의 중국접근 저지'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국교정상화는 미일안보조약을 제외한 다른 두 축의 소멸을 의미하였다. 미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양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하지만 일본의 중국접근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전개되었다. 미중공동성명은 국교정상화가 아닌 타이완문제에 관한 잠정협정에 불과했다. 중국은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을 '인식'(acknowledge)한다는 선에 머무른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해'와 '존중'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17] 미국은 이러한 다나카 내각의 과도한 접근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14) 미중공동성명(1972.2.28)에서 미국은 "타이완해협 양측의 모든 중국인이 공히 중국은 단 하나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을 인식한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중국인 자신들에 의한 타이완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을 거듭 표명한다. 이 같은 전망에서 미국정부는 타이완에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최종목표를 확인한다. 이 기간 동안 미국정부는 이 지역의 긴장정세가 완화되어 감에 따라 타이완에 있는 군사력과 군사시설을 점차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 pp.472-475.

15) Henry Kissinger(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pp.703-732.

16) 소에야 요시히데(2006)『일본의 미들파워 외교』오름, pp.84-85.

17) 타이완문제에 관한 미일 양국의 대응은 殷燕軍(2006)「日中・米中国交正常化過程の比較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따라서 8월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닉슨 대통령은 미일안보체제의 재확인을 요구하고 동시에 타이완조항 및 일본-타이완 실무관계 유지를 강조하였다.[18] 마지못해 수교를 추인(追認)한 셈이었다.[19]

셋째, 공동성명 7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 측은 국교정상화가 다른 국가간 관계에 미치는 외교·안보적 영향에 대해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 사실 중일관계는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에 종속된 것이었다. 이후 소련이 일본에 접근하여 소삼각(일본-중국-소련) 전략게임을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다나카 내각은 어디까지나 중소 등거리 외교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대국 간 전략게임에 관여되었으나 중국과 소련을 경합시키는 형태의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게임에 대한 발상이 없었다.[20] 요시다노선을 전제로 대국 간 권력정치의 논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21]

넷째, 일본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분야가 경제교류였다. 수교 직후인 11월 일본정부 사무당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 이듬 해 1월에는 통산상이 방문하여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민간 차원에서도 간사이(関西)재계(1971.9), 도쿄(東京)재계(1971.11), 나고야(名古屋)경제인(1972.7), 일본경제인대표(1972.8) 등의 방중이 줄이었다. 다섯째, 공동성

証：台湾問題の処理を中心に」『自然·人間·社会』第40号(1月), pp.51-87 참조.

18) 미중 양국 지도자는 미일안보체제를 통해 일본을 억제하는 것이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이른바 '병마개론'). 예를 들어 1971년 7월 극비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일본의 경제적 확장이 필연적으로 군사적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이에 키신저도 미일 안보관계가 일본의 공격적 정책을 방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添谷芳秀(2003)「米中和解から日中国交正常化へ：錯綜する日本像」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81-82. 더 나아가 닉슨과 키신저는 저우언라이에게 중국이 미국의 화해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Nancy Bernkopf Tucker(1996). "U.S.-Japan Relations and the Opening to China." Working Paper No.4,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and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19) 井上正也(2010), p. 482, 509, 516. 타이완조항은 1969년 11월 사토-닉슨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도 중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말한다. 즉 타이완 유사시 주일미군의 전개에 일본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이었다.

20) 당시 저명한 중국연구자 이시카와 다다오(石川忠雄)는 중일관계의 지나친 긴밀화가 미소 양국의 접근을 촉진하여 중일 양국이 미소 양국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미일관계를 기초로 중소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견해였다. 石川忠雄(1975)『日中問題私見』酒井書店, p.155.

21) 緒方貞子(1992), pp.141-142; 소에야 요시히데(2006), pp.84-8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교섭은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짧았다. 중국의 전쟁배상 포기와 일본의 경제협력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공히 개인보상을 도외시함으로써 1990년대에 불거지는 전쟁피해자들의 법적투쟁과 그로 인한 과거사 인식문제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군도) 영유권 문제는 중국의 '차세대 해결론'에 일본 측이 암묵적으로 양해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2. 경제·실무협정, 그리고 중일평화우호조약

1973년 초 양국의 대사관 설치를 필두로 각종 경제·실무협정이 신속하게 체결되어 갔다. 평화우호조약 체결 이전에 실무협정을 선행시킨다는 공동성명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1973년 5월 '해저케이블 부설협정'을 시작으로 1974년의 '기자교환공문'(1월), '무역협정'(1월), '항공·운수협정'(4월), '해운협정'(11월), 그리고 1975년의 '어업협정'(8월)이 체결되었다. 무역협정은 지난날의 민간무역의 성과 위에서 경제관계를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동 협정에서 양국은 상호 '최혜국대우' 부여와 정부대표로 구성된 '혼합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22] 그동안 취해 온 대중 무역통제의 철폐를 의미하였다.

한편 1973년 3월부터 74년 4월까지 진행된 항공·운수협정 교섭은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먼저 중국 측이 기존의 일본-타이완 항공노선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타이완 중화항공이 사용하는 '중화'(中華)라는 용어와 타이완 국기('청천백일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6항목의 '외무성·운수성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번에는 타이완과 자민당 친타이완파 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23] 그 와중에 오히라 외상은 교섭을 강행하여 협정에 조인하였다. 조인 후 오히라 외상은 "일본국과

22)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 pp.127-130.

23) 다음은 6항목의 내용이다. ①일본-타이완 노선은 민간협정으로 유지한다. ②일본항공(JAL)은 타이완 노선에 취항하지 않는다. ③중화항공의 회사명과 국기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별도의 기회에 밝힌다. ④중국민항은 나리타(成田), 중화항공은 하네다(羽田)를 사용한다. ⑤오사카(大阪)공항을 이용하는 중화항공은 다른 공항으로 이전한다. ⑥중화항공의 일본 내 영업소 및 그 밖의 서비스는 대리점 등에 위탁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국 사이의 항공운수협정은 국가 간 협정이고 일본-타이완 간은 지역적인 민간 항공왕래이다. 일본국 정부로서는 중일 양국의 공동성명에 근거하여 동 성명 발표일 이후 타이완의 항공기에 부착된 깃발의 표식을 이른바 국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화항공공사(타이완)'를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24] 당일 타이완은 일본-타이완 항공노선의 전면정지, 그리고 일본항공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권(FIR) 내 비행금지를 선언하였다.[25]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후 미키 내각의 대응이었다. 특히 미야자와 기이치(宮沢喜一) 외상은 친타이완파 의원들을 통해 타이완과 항공노선 재개를 모색하였다. 1975년 4월 타이완 장제스 총통 사망 직후에 열린 국장(国葬)에는 친타이완파 뿐 아니라 사토 전수상, 다나카파 의원들도 대거 참여하였다. 또한 미야자와 외상은 국회답변에서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청천백일기를 '국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8월 일본-타이완 항공노선이 1년 3개월 만에 재개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다.[26]

각종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는 가운데 중일 간 인적, 경제적 교류 또한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였다. 인적교류는 1972년 9,046명(방중 일본인 8,052명 및 방일 중국인 994명)에서 '73년 12,229명(10,238명 및 1,991명), '74년 16,151명(12,990명 및 3,161명), '75년 21,096명(16,655명 및 4,441명), '76년 22,843명(18,825명 및 4,018명), '77년 27,484명(23,445명 및 4,039명), '78년 46,525명(40,574명 및 5,951명), '79년 65,696명(54,074명 및 11,622명)으로 7배 이상 확대되었다.[27] 무역규모는 1971년 9억 136만 달러에서 국교정상화 이듬해인 1973년부터 수출입이 급증하여 1975년 37억 8,965만 달러, 그리고 1978년 50억 7,904만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표1). 중국의 원유(原油)수출, 일본의 플랜트수출계약 등으로 인한 철강·기계설비 비중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28] 참

24)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 pp.140-141.
25) 寺井久美(1974)『航政研シリーズNo.68 日中航空協定交渉について』航空政策研究会(6月).
26) 丹羽文生(2008)「日中航空協定締結の政策決定過程：自民党日華関係議員懇談会の影響力」『問題と研究』第37巻4号, pp.152-154.
27)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 p.690.
28) 중국의 전체수출 가운데 42.4%를 원유가 차지하였고 이 가운데 70%가 일본에 수출되었다. 日本経済産業省(1979)『通商白書 1979年版』http://www.meti.go.jp/hakusho/index.html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로 1974년에는 중일무역이 일본-타이완 무역을 능가하게 되었다.

〈표1〉 일본의 주요국 수출입 추이, 1972년-1978년 (단위: 천 달러)

연도	중국		타이완		소련		한국		미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71	578,188	323,172	923,332	286,017	377,267	495,880	855,687	274,421	7,495,250	4,977,882
1972	608,921	491116	1,090,616	421,864	504,179	593,906	979,793	425,992	8,847,678	5,851,634
1973	1,039,494	974010	1,641,759	890,696	484,210	1,077,701	1,789,115	1,207,309	9,448,678	9,269,559
1974	1,984,475	1,304,768	2,009,007	955,188	1,095,642	1,418,143	2,656,056	1,568,041	12,799,350	12,682,206
1975	2,258,577	1,531,076	1,821,669	811,587	1,626,200	1,169,618	2,247,723	1,307,999	11,148,605	11,608,066
1976	1,662,568	1,370,915	2,279,765	1,189,830	2,251,894	1,167,441	2,824,464	1,916,773	15,689,579	11,809,255
1977	1,938,643	1,546,903	2,552,676	1,228,666	1,993,877	1,421,875	4,079,602	2,113,840	19,716,908	12,396,082
1978	3,048,748	2,030,292	3,584,744	1,750,153	2,502,195	1,441,723	6,003,046	2,591,029	24,914,690	14,790,362

출처: 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1992, 254-259)에서 발췌·재작성.

여기서 이 시기 중일무역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일본은 1960년대에 이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일무역은 1963년 중국 총무역액의 5.3%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1970년에는 20%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유럽 전체의 대중 무역규모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일본은 중국 총수입의 30%(EC 20%, 미국 7%), 총수출의 19%(EC 11%, 미국 2%, 홍콩 19%)를 차지하였다.[29] 서독, 영국 등에 비해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강하고(중국의 자원, 농산물, 경공업품 등과 일본의 화학비료, 철강, 기계류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며 수출입 밸런스를 비교적 잘 유지해 온 것이 주된 이유였다.[30] 일본은 풍부한 천연자원뿐 아니라 수출시장으로도 유망한 소련, 동유럽, 중국을 포함한 동서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은 OECD 가운데 최대의 대소 무역상대국('71년 OECD 대소 무역총액의 16.1%)이기도 했다.[31] 더욱이 중국은 1971년 이후 제4차 5개년 경제계획 하에 경제건

29) 日中経済協会(1979)『1978年米上下両院合同経済委員会報告：毛沢東以後の中国経済』日中経済協会(4月), pp.478-479.

30) 참고로 중국의 무역정책은 자력갱생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즉, 소비재는 원칙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며 자본재와 공업원료를 수입하되 이 경우도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는 방식이었다. 수출은 기본적으로 수입결제 대금을 획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日本経済産業省(1972)『通商白書 1972年版』http://www.meti.go.jp/hakusho/index.html

31)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은 전체 원유수입량의 3.8%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우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설을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3월 '국민경제발전 10개년 계획'(1976-85)을 통해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4대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경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증대되었다. 과거 중일무역은 우호무역(友好貿易)과 LT/각서무역(覚書貿易)을 축으로 이루어졌다.[32] 1973년 2월 중국 측이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모든 무역상사 및 기업이 중일무역에 참가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1960년대 후반 중일무역의 7-9할을 차지해 온 우호무역은 막을 내렸다. 각서무역도 1972년 10월 마지막 각서무역협정 체결로 그 임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각서무역사무소를 계승하여 일중경제협회(日中経済協会)가 설립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는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사이의 균형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국이 제1차 산품을 수출하고 일본이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수직적 무역구조 속에서 중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점차 누적되었다. 그에 더하여 중국의 대일 플랜트 수입이 격증하는 가운데 일본수출입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신용공여에 의한 뒷받침도 충분치 못하였다. 일본수출입은행 융자 이외에 연체지불, 현금결제 방식 등으로 인해 중국의 지불능력도 점차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33]

COCOM 규제 완화문제도 존재했다. 1970년대 초 일본정부는 미중화해를 배경으로 무역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971년 5월 '요시다 서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수출입은행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곧이어 수출금지항목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1972년 봄에는 플랜트수출 융자조건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1978년 봄에는 히타치(日立)의 중국 중앙기상국에 대한 대형 컴퓨터 수출이 연산능력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되었다. 하지만

아라비아(28.9%), 이란(24.4%), 인도네시아(12.8%), 쿠웨이트(8.8%)에 이은 다섯 번째였다.

32) 이에 대해서는 添谷芳秀(1995)『日本外交と中国』慶応通信, pp.234-43 가 자세하다.

33) 중국의 플랜트 수입에 있어서도 일본의 지위는 독보적이었다. 플랜트 계약액을 보면 1973년 전체 계약액 1,259백만 달러 가운데 461백만 달러(프랑스 400백만 달러, 미국 205백만 달러, 네덜란드 89백만 달러, 서독 4백만 달러, 영국 8백만 달러, 이탈리아 79백만 달러, 덴마크 13백만 달러), 74년 831백만 달러 가운데 348백만 달러(서독 296백만 달러, 프랑스 171백만 달러, 이탈리아 16백만 달러), 75년 364백만 달러 가운데 38백만 달러(서독 90백만 달러, 영국 200백만 달러, 이탈리아 36백만 달러), 76년 185백만 달러 가운데 146백만 달러(서독 31백만 달러, 이탈리아 8백만 달러, 핀란드 NA), 77년 59백만 달러 가운데 20백만 달러(서독 39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주된 업종은 에틸렌, 폴리에스텔, 폴리에틸렌, 암모니아, 철판/강판, 베어링, 방적, 합판, 합성고무, 천연가스정제 등이었다. 日中経済協会(1979), pp.468-7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OCOM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된 것은 1979년 1월 미중국교정상화 이후였다. 미국은 1971년 봄 이후 미국인 중국여행 제한 철폐와 대중 무역규제 완화(4월), 그리고 대중 비전략물자 금수조치 철폐(6월)를 발표하여 금수조치를 완화한 바 있었다. 그러나 타이완문제로 미중국교정상화는 지미 카터(Jimmy Carter) 정권에 들어서도 답보상태를 계속하였다. 중국이 미국-타이완 외교관계 단절, 타이완주둔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타이완 상호방위조약 파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중미 간 무역은 재개되었지만 미국의 중국자산 동결 및 청구권 문제, 최혜국대우조치 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34]

사실 COCOM 규제는 미국의 대공산권 무역통제정책을 짙게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역통제 수준을 규정한 컨트리 그룹(Country Group)의 변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연하면 1965년 중국은 북한, 베트남, 쿠바와 더불어 가장 엄격한 통제 대상국이었다.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로 인해 중국은 소련 및 동유럽과 동등한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즉 중국의 지위가 소련 이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1980년에는 미국의 중소 이간책으로 중국은 소련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전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데 대한 대응조치였다. 중국이 서유럽 및 일본과 동등한 그룹으로 분류된 것은 1984년 이후였다.[35]

마지막으로 1970년대 후반의 최대 현안은 평화우호조약 체결문제였다. 교섭은 1974년 말에 개시되었으나 1978년 8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타결되었다. 당초 조약은 쉽게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나카 수상에 이은 미키 다케오 수상(1974.12-'76.12)도 소신표명 연설에서 조속한 조약 타결을 언명하였다.[36] 그러나 <도쿄신문>(東京新聞)(1975.1.23)의 "반패권 조항이 교섭의 초점" 보도 이후 교섭은 난항에 빠졌다. 중국이 '반패권 조항'의 삽입을 주장한 데

34)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7,650만 달러에 달하는 자국 내 중국자산을, 중국은 1억 9,690만 달러 상당의 미국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1974년 통상법'(공산주의 국가와 쌍무적 무역협정 체결 및 그 의회에서의 승인 등을 규정)으로 인해 대중 최혜국대우 부여가 금지되어 있었다.

35) 加藤洋子(1992)『アメリカの世界戦略とココム 1945-1992』有信堂, pp.202-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관계로 무기류, 군사물자, 첨단기기 등 전략물자 수출은 여전히 제한되었다.

36) 미키 수상은 중일평화우호조약을 프랑스와 서독이 역사적인 화해를 달성한 1963년 1월의 프랑스-서독 협력조약(France-German Cooperation Treaty)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増田卓二(1975)『実録・三木武夫：信念のクリーン宰相』ホーチキ商事株式会社出版部, p.2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해 이를 삽입하면 소련이 대소 동맹조약으로 간주할 우려가 있어 일본정부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소련은 조약체결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함과 동시에 브레즈네프(L. Brezhnev) 서기장 친서를 통해 '일소선린협력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정부 간 교섭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미키 내각은 1975년 9월 '미야자와 4원칙'을 제시하였다. 반패권을 반소가 아닌 보편적 원칙으로 이해한다면 명기해도 좋다는 양보안이었다. '미야자와 4원칙'은 ①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 어디에서도 패권에는 반대한다. ②패권반대는 특정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③패권반대는 중일 양국의 공동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유엔헌장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패권' 언급이 없는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일공동성명을 준수하는 편이 낫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였다. 교섭이 정체된 이유는 양측 모두 선택의 폭이 극히 협소했기 때문이었다.[37] 중국으로서는 반패권이 국시(1975년 신헌법에 명기)이고 급진파 '4인방'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양보의 여지가 적었다. 일본외무성도 반패권이 반소를 의미하는 이상 공동성명 당시와 같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중국은 소련에 대항한 반패권, 소련은 대중 포위망인 '아시아집단안보'를 주장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저우언라이, 마오쩌둥, 주더(朱德) 등의 사망, 덩샤오핑(鄧小平) 국무원 부수상의 '4인방'에 의한 추방 등 중국 내정도 조약 타결을 저해한 요인 중 하나였다.[38]

교섭이 다시 궤도에 오른 것은 1977년 가을이었다. 중국공산당 부주석으로 부활한 덩샤오핑이 9월 일중우호의원연맹(日中友好議員連盟) 방중단에게 후쿠다 다케오 수상이 결단만 하면 조약은 "1초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1978년 3월 중국은 다시 공명당의 야노 쥰야(矢野絢也) 서기장을 통해 '중일조약 체결에 관한 중국 측의 4항목 견해'를 전달하고, 교섭재개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에 후쿠다 수상은 5월 23일 각료회의에서 교섭 재개 의사를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다. 본 교섭의 쟁점은 '제3국 조항'을 어떤 식으로 삽입해야 할 것인가에 있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일본 측이 두

37) 田中明彦(1991), pp.92-93.
38) 緒方貞子(1992), p.1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본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양 체약국은 본 조약을 체결하여 평화우호관계를 강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제3국의 이익을 해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안이었다.

8월 9일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상과 황화(黃華) 외교부장 간 회담에서 중국 측이 두 안 가운데 전자에 동의하고 이를 제4조에 삽입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교섭이 타결되었다(8.12 조인). 조약 제1조는 공동성명 ⑥항을 거의 답습하는 내용이었다. ‘반패권 조항’을 다룬 제2조도 약간의 내용 추가를 제외하고는 공동성명 ⑦항과 동일하였다. 이어 제3조에서는 공동성명 ⑥항의 내용(선린우호정신, 평등 및 호혜, 내정 불간섭) 외에 경제 및 문화관계의 발전과 국민교류 촉진에 노력한다는 점이 추가되었다.

> 제2조. 양 체약국은 공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한 그 외의 어떠한 지역에서도 패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이러한 패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 밖의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에 의한 기도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을 표명한다.
>
> 제4조. 본 조약은 제3국과의 관계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평화우호조약에 대해 중일 양국은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중국은 대소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파악한 반면 일본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대소전략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 타협의 결과가 양측의 ‘자기구속’에 의한 패권반대 표명이었다. 리언민(李温民)은 중국외교부 담당자의 언급을 빌려 “평화우호조약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부 간 구속인 공동성명의 제반 원칙을 국가 간의 구속인 조약으로서 재확인한 점”이라고 설명하였다.[39] 당시 중국 지도부는 일본이 경제대국화를 배경으로 타이완, 한국, 그리고 말라카해협까지 군사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일본 측도 아시아 주변국이 중국의 장래는 물론 일본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40] 중일관계, 일소관계를 단순한 쌍무적

39) 李温民(2005), pp.19-2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관계로 간주하여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배경에는 동남아에 대한 고려도 작용하였다. 외교·안보에 관한 이러한 현상유지 자세는 경제분야의 공격적 자세와 대비되었다. 경제협정 및 교류 확대노선은 요시다 내각 이래의 통상국가 노선이 이케다 내각 시기의 중일무역 좌절을 거쳐 전면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요시다노선의 적용범위가 중국으로 확대되고, 향후 경제관계가 중일관계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Ⅲ. 일본의 중국접근과 현상유지적 대외정책 간의 함수

1. 정부 내 정책결정과 관료적 적응

다나카 내각은 미국에 앞서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단행하였다. 후쿠다 내각 시기의 평화우호조약은 중국이 서방과 최초로 맺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과연 대외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문제를 둘러싼 정책결정의 중층적 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 내 정책결정은 내각의 외교정책 성향과 정권기반, 그리고 각료(수상과 대신)와 관료기구의 관계로 이루어졌다. 다나카-미키-후쿠다 수상은 정책성향으로 볼 때 각각 자민당 내의 보수본류, 보수리버럴, 그리고 보수우파에 해당되었다. 요시다 시게루에서 이케다 하야토, 사토 에이사쿠, 다나카 가쿠에이 및 오히라 마사요시로 이어지는 보수본류는 외교·안보의 대미협조와 통상국가를 지향하였다.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후쿠다 다케오, 나카소네 야스히로를 비롯한 보수우파는 보수본류에 대항하면서 헌법개정, 재군비를 통한 대미자주를 주장하였다. 한편 이시바시 단잔, 마쓰무라 겐조, 미키 다케오 등 보수리버럴은 대미자주를 주장하면서 개헌 및 재군비에는 반대하였다.[41] 미일관계가 전후 일본외교의 근본적인 프리즘이었던 셈이다.

---

40)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1993), pp.181-182.

41) 자민당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대외 정책성향은 물론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나 보수본류, 보수우파, 보수리버럴로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일반적이며 1970년대의 경우도 이러한 구분이 특히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국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 같은 프리즘에 투영되었다. 보수본류는 미일안보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 정경분리를 실행하였다. 중국의 유엔가입 후 이들 대부분은 친중파로 전향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일관계를 미일관계에 우선한 것은 아니었다. 보수우파는 반공(反共)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타이완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대미자주의 출구로 간주되는 측면도 있었다. 보수리버럴은 대미자주와 반군국주의의 욕구를 중국접근에서 구하였다. 자민당 내의 전통적 친중파 세력이었다.[42]

물론 정책성향과 정책운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 수상의 정책의제 설정과 의지, 그리고 내각의 정권기반에 따라 다양한 변조(変調)가 이루어졌다. 다나카 내각은 내각출범 전 이미 주류 4파(다나카파, 오히라파, 미키파, 나카소네파) '정책협정'을 통해 중일국교정상화를 핵심과제로 내걸고 있었다.[43] 이를 주도한 것이 친중파 거물 미키 다케오였다. 그는 오히라 마사요시와 함께 중국정책, 특히 대중접촉과 당내 의견조정을 담당하였다. 오히라도 이케다 내각 당시 외상을 역임, 중국문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었다. 다나카 수상과 오히라 외상 사이에도 전자가 정치적 결단, 후자가 외교업무를 전담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수상 이하 미키 부수상, 오히라 외상, 나카소네 통산상, 니카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관방장관 등 가히 국교정상화를 위한 내각이었다.

이를 위한 조건도 대부분 갖추어져 있었다. 사토 내각은 중일관계와 일본-타이완 관계의 역전, 즉 중일관계의 전면 정상화와 일본-타이완 관계의 정경분리로의 전환을 굳힌 상태였다.[44] 게다가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民社党) 등 야당

42) 참고로 미키 다케오는 일찍이 미중소 불가침조약 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다. 후루이 요시미(古井喜実)는 중일 불가침조약 같은 것을 만들어 이를 일소, 미일 간에도 적용하자는 '안보해소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보수본류는 이와 같이 중국 붐에 편승하여 미일안보를 흔들려는 힘이 너무 빨리 분출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世界編集部(1972), pp.106-107.).

43) 본래 정책협정은 다나카파-미키파-오히라파 3파에 의한 것이었으나 나중에 나카소네파가 합류하였다.

44) 모리 하루키(森治樹)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의 언급. 사실 전임 사토 수상의 경우도 "중일국교가 정상화되면 중국의 대표는 중공[中共], 타이완과는 우호친선관계, 차관도 계속할 것(단, 신규 차관에는 신중), 종래의 정경분리의 반대로 정경은 베이징, 타이완은 경제가 된다. 또한 미일안보조약 상의 타이완의 지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井上正也(2010), pp.478-48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도 중국과 자민당을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었다. 자민당 내 친타이완파 세력도 중일수교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고 있었다.[45]

반면 미키, 후쿠다 내각이 처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 친중파인 미키 수상은 임기 중에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타이완 노선 재개 이외에 미키 내각이 이룬 것은 어업협정 하나뿐이었다. 이는 중국내부의 정치투쟁, 소련의 반발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각의 정치기반 또한 견고하지 못하였다. 미키 내각에서는 미키파, 후쿠다파, 나카소네파가 주류파로 올라서고 주류파였던 다나카파, 오히라파가 비주류로 전락하였다. '록히드 사건'으로 다나카 수상이 사임한 뒤 클린 정치를 표방한 미키 수상은 다나카파-오히라파를 당 집행부에서 배제하고 있었다.[46] 미키파는 다나카파, 후쿠다파, 오히라파에 이은 네 번째 파벌에 지나지 않았다. 당과 내각의 진용에 있어서도 후쿠다 다케오 부수상, 나다오 히로키치(灘尾弘吉)가 총무회장, 미야자와 기이치 외상(76년 9월부터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郎]) 등 친타이완파가 주류였다. 실로 각료의 반 이상이 일화관계의원간담회(日華関係議員懇談会) 구성원이었다.[47]

한편 후쿠다 내각의 주류파는 후쿠다파, 미키파, 그리고 나카소네파였다. 각료는 소노다 스나오 외상, 고모토 도시오 통산상 등이었다. 기시 노부스케를 잇는 보수우파임에도 후쿠다 수상은 조약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조약체결 촉진파는 다나카파, 오히라파, 미키파였고 신중파는 후쿠다파, 나카소네파였다. 게다가 1978년 4월 200여척에 이르는 중국어선이 센카쿠열도를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내 의견은 거의 양분되었다.[48] 문제는 제한된 시간

45) 한편, 다나카 내각 후반 항공협정을 둘러싸고 당내 분규가 발생하자 다나카파는 신중자세를 취하였고 나카소네파는 의견이 양분되었다. 협정 조기체결에 찬성한 것은 미키파와 오히라파뿐이었다. 그 결과 오히라 외상은 당내에서 사면초가의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46) 1976년 2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전일본항공(ANA)에 항공기를 판매하는 과정에 그 공작금이 정부고관(다나카 수상)에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그 결과 7월 도쿄지검이 다나카 수상과 비서관을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47) 丹羽文生(2008), p.152.

48) 당시 <아사히신문>(朝日新聞)(1978.4.1) 앙케이트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전의원 가운데 조약체결 촉진론자는 118명, 신중론자는 158명이었다. 上原隆(1978)「福田首相 その頼りなさの研究」『中央公論』(6月号), p.52. 센카쿠열도를 점거한 중국어선은 암호, 기관총 등을 휴대하는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과 친타이완파의 아성으로 불리는 자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중국 측이 교섭 재개의사를 밝힌 것은 임기를 반년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수상 자신이 자파인 후쿠다파, 아시아문제연구회(A研), 일화의원간담회, 세이란카이(青嵐会) 등 조약체결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친타이완파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만나서 설득공작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49] 결국 후쿠다 내각의 정책운영이 앞 시대의 내각이 설정해 놓은 중국정책에 수렴된 셈이다.

한편 수상·각료와 관료기구 사이에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간의 관계는 '협력(協力)'과 '경쟁'(競争)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관료기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처리하고, 정치가는 중대한 외교적, 경제적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조달하는 식의 분업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 게임을 전개할 수도 있다.[50] 전술한 것처럼 자민당 정권의 중국정책 결정패턴은 이케다 내각 이래 점차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화하였다. 단, 국교정상화와 평화우호조약에서 수상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발휘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중교섭, 정치적 결단, 당내 의견조정 등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정책구상이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정부의 방향전환이 "환경변화에 대한 관료적 적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황이 변하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과거의 정책 원리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도 적응도 아니다. 관심은 오로지 방향전환의 엔지니어링에 집중되고 있다," "자민당 정권의 냉전외교의 방향전환 노력이 지금까지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재검토는 미뤄둔 채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적응에 모든 것을 환원시키

등 사실은 중국해군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친타이완파는 중국의 패권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도가와 이사무시(1984)(임창출판공사편집부 역) 『세계대통령·수상 대회고록: 다나까 가꾸에이』 임창출판공사, pp.304-305.

49) 후쿠다 수상은 또한 소노다 외상의 조약체결에 대한 과도한 의욕을 경계하였다. 친타이완파를 자극하여 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世界編集部(1978)「日本の潮4・日中条約: 福田政治の戦略」『世界』(7月号), pp.153-156.

50) カーティス、ジェラルド(山岡清二訳)(1987)『日本型政治の本質：自民党支配の民主主義』TBSブリタニカ, pp.272-273; 渡辺昭夫(1988)「議会と外交政策」『年報・近代日本研究：近代日本研究の検討と課題』山川出版会, p.36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고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였다.[51] 일본정부가 대세(大勢)에 대체적으로 순응하면서 기존의 틀 내에서 신속한 변환(変換)을 취하는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정부의 관료적 적응에는 두 가지 패턴이 두드러졌다. 첫째, 중국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1960년대와 비슷하게 수상과 일부 각료, 그리고 관료기구로 이어지는 비공식 정책라인이 가동되었다. 다나카 내각에서는 수상, 오히라 외상, 다나카의 참모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그리고 하시모토 다다시(橋本恕) 외무성 중국과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교섭준비를 담당하였다. 오히라 외상은 하시모토 과장에게 교섭준비 개시를 지시하고 동시에 외무성 안에 조약국장, 조약과장, 중국과장으로 구성된 비공개 핵심그룹을 가동시켰다.[52] 오히라 외상이 통상적인 외교정책 결정방식을 택하지 않은 것은 외무성 안에 여전히 소극적 의견이 존재하고, 교섭관련 정보가 자민당 친타이완파에게 누설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53] 미키 수상은 <도쿄신문> 보도 이후 외무성을 불신하여 측근을 방중시키는 등 비공식 채널을 빈번하게 이용하였다.[54] 외무성이 소련의 반발을 우려하여 중국 측의 '반패권' 제안사실을 극비에 부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후쿠다 수상은 외무성 내에 차관, 아시아국장, 조약국장 등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조직하였다. 후쿠다 내각에서는 수상과 외상의 관계가 그다지 원만하지 못하였다. 후쿠다 수상은 1978년 가을 소노다 외상을 배제하고 주중일본대사와 외무성 당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지시하였다. 소노다 외상의 과도한 의욕과 지나친 대중접촉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55] 비공식 정책라인에 대한 의존은 내각과 관료기구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라는 기능 이외에 반대파 및 여론에 대한 비밀 유지, 수상-각료 간 의견·자세 차이의 봉합, 내각-외무성 간 의견 불일치의 극복을 위한 것이었다.

---

51) 山本満(1972)「日中復交・革新外交の次の課題」『中央公論』(12月号), pp.100-101.

52) 한편, 하시모토 과장은 다나카가 수상이 되기 전부터 조언을 하는 관계였으며 1972년 1월 국교정상화를 위해서는 타이완과의 단교가 불가결하다는 내용의 '하시모토 레포트'를 작성한 바 있다.

53) 한편 오히라 외상은 7월 이후 외무성 내에 국장급 이상이 참가하는 '중국문제대책협의회'를 통해 공개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중일교섭도 외무성을 통한 공식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동 협의회는 정책결정 보다는 외무성 내의 의견 통일, 그리고 타 성청과의 연계를 위한 것이었다. 井上正也(2010), pp.491-508.

54) 緒方貞子(1992), p.149.

55) 당시 친타이완파는 이러한 소노다 외당의 자세를 비판하였다. 世界編集部(1978), pp.153-1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둘째, 정책의 거시적 방향성에 있어서도 관료적 적응이 두드러졌다. 사실 다나카 내각의 '중국과의 외교관계, 타이완과의 경제관계' 입장은 사토 내각의 방침을 추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당초 사토 내각은 가능한 한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지향하고 있었다. 기존의 정책 틀 내에서 대처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유엔가입과 닉슨쇼크로 사토수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등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외무성에 전환을 지시하여 그 동안의 비타협적 태도가 일변하였다. 외교관계의 상대를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변경한 것은 분명 급격한 궤도수정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56]

게다가 일본정부의 대미 안보공약은 약화되기는커녕 한층 더 강화되었다. 다나카 수상은 닉슨 대통령과의 하와이회담에서 미일안보체제 재확인과 타이완조항·극동조항을 견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닉슨 독트린' 수행을 위해 방위체제 정비·강화, 화기·항공기·함정 등 주요 무기 대폭 증강, 그리고 무기 국산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신방위력정비계획'(1972년부터 5년간 총액 5조 7,960억 엔 규모)도 마련되었다(1971.4). 다나카 수상의 소련방문('73.10) 및 ASEAN 5개국(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방('74.1), 후쿠다 수상 내각의 중소 등거리 외교, 그리고 동남아 중시노선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통상정책도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배경으로 중동접근과 자원외교가 강화되었으며 경제대국 지위도 급격히 향상되었다.[57] 반면 그로 인해 미국·서유럽과의 무역마찰은 물론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갈수록 증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자원공급국을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인식되었다.[58]

---

56) 닉슨쇼크와 석유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될 경우의 정책전환에 대해서는 近代日本研究会(編)(1985)『年報・近代日本研究：日本外交の危機認識』(第7号) 山川出版会가 자세히 다루었다.

57) 1975년 12월 종합에너지대책 각료회의는 '종합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주된 정책방향은 국산 에너지자원 활용과 해외 에너지 다양화, 원자력개발 추진, 석유 안정공급 확보, 2차 에너지(전력, 가스 등) 공급, 에너지 절약정책 추진, 기술개발 추진, 국제협조 추진 등이었다. 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1994)『通商産業政策史(17) 資料・索引』通商産業調査会, pp.448-449.

58) 여기서 일본정부가 고안한 것이 대외경제협력을 서방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이른바 '전략원조'의 발상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방위비와 대외경제협력비를 합친 '총합안전보장' 경비를 통해 서방에 대한 공헌의 열매를 보여주고자 하는 발상"이었다. 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2. 자민당 내 친중파와 친타이완파의 대결

자민당 내의 외교조사회, 정무조사회 산하의 부회(외교부회, 교통부회, 항공대책특별위원회 등), 당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총무회는 여전히 실질적인 정책심의 보다는 당지도부(총재, 부총재, 총무회장, 간사장, 정무조사회장)의 방침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 대신 1955년 자민당 결성 이후 외교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것이 파벌정치였다.[59]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친중파 및 친타이완파 세력이 파벌을 횡단하는 형태로 각각 조직화를 꾀하였다. 보수우파 중심의 친타이완파는 일화협력위원회(日華協力委員会, 1956년 설립)를 모태로 한 아시아문제연구회(A研, 1964년 설립)를 통해 중국 유엔가입 반대, 타이완 유엔의석 옹호, 공산권무역 반대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친중파는 일중문제연구회(日中問題研究会, 1960년 설립), 아시아·아프리카연구회(AA研, 1964년 설립), 일중국교회복의원연맹(日中国交回復議員連盟, 1971년 설립) 등을 통해 중일무역 확대, 중국 유엔가입, 중일수교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친중파는 보수리버럴 중심의 전통적 친중파, 그리고 1970년대 초에 합류한 보수본류로 구성되었다. 중국문제는 그 동안 보수여당과 혁신야당을 분열시킨 핵심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대결구도는 기본적으로 자민당 내부에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1970년대 친중파와 친타이완파의 대결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대결은 내각의 중국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대결의 무대는 국교정상화, 항공협정, 그리고 평화우호조약이었다. 국교정상화를 둘러싼 제1라운드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전통적 친중파인 보수리버럴과 새로운 친중파 보수본류였다. 다나카 내각 출범 직후 자민당 집행부는 정무조사회 산하의

외경제협력이란 정부개발원조(ODA)를 말한다. 五百旗頭真(編)(2006)『戦後日本外交史』有斐閣アルマ, p.186.

59) 다나카-미키-후쿠다 내각 시기 자민당 파벌은 5개의 대파벌과 4개의 중소파벌로 구성되었다. 대파벌은 다나카파, 후쿠다파, 오히라파, 미키파, 나카소네파, 그리고 중소파벌은 시이나(椎名)파, 미즈타(水田)파, 후나다(船田)파, 이시이(石井)파였다. 참고로 파벌정치는 당내의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한편 정권당으로서의 폭을 넓혔고 내각이 위기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수상 파벌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다른 파벌에서 수상을 선택함으로써 이미지를 호전시켜 혁신야당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世界編集部(1972)「日本の潮1・田中政権と日中関係」『世界』(9月号), pp.156-1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중국문제조사회(中国問題調査会)를 총재직속 일중국교정상화협의회(日中国交正常化協議会)로 확대, 개편하였다. 회장에 고사카 젠타로 전외상, 부회장에 후루이 요시미 등 친중파 의원 12명, 그리고 자민당 중의원·참의원 431명 가운데 249명이 참가한 대규모 조직이었다. 국교정상화를 위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친타이완파는 후쿠다 다케오가 총재선거에서 다나카에 패배함으로써 위축되었다. 여론도 중일국교정상화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차선책은 기존의 일본-타이완 관계를 가능한 한 유지하는 것이었다.

기시 노부스케,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등 중진 친타이완파 의원는 물론 후쿠다파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 의원들은 타이완을 '배신'하는 형태의 국교정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일화평화조약 폐기, 그리고 중일수교로 인한 타이완 조항 및 극동조항의 해석변경은 미일안보조약을 약체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였다.[60] 이들은 외교문제간담회(外交問題懇談会, 1971.3-72.9)를 조직하여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①양국 대등한 입장, 조건 없이 교섭에 임할 것, ②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말 것, ③국교정상화에 대비하여 국내체제를 정비할 것, ④대일 국교회복 3원칙을 인정하지 말 것, ⑤사죄, 배상을 입 밖에 꺼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타이완과 단교할 경우 타이완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친중파와 친타이완파의 대결은 1972년 8-9월 일중국교정상화협의회에서 최고조에 달하였다. 자민당 집행부는 결국 9월 5일 '일중국교정상화기본방침'을 채택하고 9월 8일 당의결정(党議決定)을 내림으로써 일단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총재선거에서 다나카 지지를 표명한 나카가와 이치로(中川一郎),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하마다 고이치(浜田幸一) 등 친타이완파 의원들이 유화적 태도로 바뀐 것이 주효했다.[61]

항공협정을 둘러싼 제2라운드에서는 친타이완파가 역습에 나서고 친중파가 방어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친타이완파는 일화문제간담회를 잇는 일화관계의 원간담회와 세이란카이로 집결하였다. 세이란카이는 1973년 1월 와타나베 미치오(나카소네파), 나카가와 이치로(미즈타파), 후지오 마사유키(藤尾正行/후쿠다파), 나카오 에이이치(나카소네파), 하마다 고이치(시이나파), 이시하라 신타로

60) 若宮啓文(1995)『戦後保守のアジア観』朝日選書, p.116.
61) 世界編集部(1972)「日本の潮1・田中政権と日中関係」『世界』(9月号), pp.156-15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카소네파) 등 33명이 발기한 모임이었다. 파벌 구성은 후쿠다파 12명, 나카소네파 10명, 시이나파 4명, 미즈타파 2명, 미키파 1명, 후나다파 1명, 무파벌 3명이었다.[62] 같은 해 3월 결성된 일화관계의원간담회는 친타이완파 의원 27명이 발기인이 되고, 자민당 중참의원 중 3분의 1이 넘는 152명이 설립취지에 서명하였다.[63]

친타이완파의 공격대상은 6항목 정부안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일본-타이완 항공노선의 현상유지, 그리고 타이완대사관 부지 처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 금지였다. 이에 대해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등 여야당 친중파 의원들은 세이쿠카이(青空会)를 조직하여 정부에 대해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였다. 오히라 외상이 협정체결을 강행하자 국회비준 투표에서는 기시 노부스케, 후쿠다 다케오 및 후쿠다파 의원, 세이란카이 의원, 그리고 일화관계의원간담회 의원 등 약 80명이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오히라 외상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다나카 내각 타도를 주장하였다.[64] 또한 일화관광협회(日華観光協会)를 조직하여 공공연히 타이완과의 교류를 촉진하기도 하였다.[65] 후지오 마사유키는 교섭 저지를 위해 반패권 문제를 언론에 유출시킨 장본인이었다.

제3라운드의 평화우호조약을 둘러싼 대결은 흥미롭게도 친중파와 친타이완

62) 세이란카이의 취지문은 외교는 자유주의 국가들과 친밀한 연계를 견지한다, 국가도의를 고양시키기 위해 물질만능의 풍조를 개선하고 교육 정상화를 단행한다, 부의 편중 및 불로소득을 배제한다, 국방과 치안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자주독립 헌법을 제정한다, 당 운영은 구태의 폐습을 타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은 엘리트코스(도쿄대-중앙관청 관료-정치인)를 거친 관료출신 의원이나, 2-3세 세습의원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들이었다. 田原総一朗(1978)「青嵐会 幻の反乱」『中央公論』(10月号), pp.173-177.

63) 일화관계의원간담회가 설립 목적으로 내건 것은 중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타이완 간 '우호관계의 유지와 발전'이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중화민국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종래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중국과) 교섭한다"는 자민당의 중일국교정상화 기본방침(72.9)을 그 근거로 들었다. 동 간담회는 1997년 2월 초당파 모임인 일화의원간담회(日華議員懇談会)로 개조되었다. 丹羽文生(2008), p.145, 155.

64) 세이란카이 구성원들은 중에는 강렬한 반엘리트, 반관료 감정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또한 요시다류의 비정치 경제중심주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독립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정치중심노선으로 전환하고자 한 기시 노부스케류의 정치를 선망하였다. 주된 슬로건은 반공이었다. 이케다 전수상을 비롯하여 후쿠다 다케오, 오히라 마사요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모토 도시오, 다나카 가쿠에이 등 개헌을 부정하면서 경제중심주의로 매진하는 자민당 실력자/파벌 영수들이 그 비판의 대상이었다. 田原総一朗(1978), pp.173-182.

65) 世界編集部(1974)「日本の潮3・日中航空協定と台湾派の動向」『世界』(3月号), p.20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파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보수본류가 추진파와 반대파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파벌구도로 보면 추진파는 다나카파, 오히라파, 그리고 미키파에 포진하고 있었다. 조약이 아시아 정세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명분이었다. 이들은 1977년 10월 고사카 젠타로를 회장으로 한 일중평화우호조약협의회(日中平和友好条約協議会)를 설립하고 후쿠다 내각에 대해 교섭에 적극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에 비해 반대파에는 나카소네파가 대거 합류하였다. 이들은 중국이 요구하는 '반패권 조항'을 삽입하면 중소대립에 휘말리게 될 것이며, 그 보다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 세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66]

자민당원 반수 이상도 중소대립을 염두에 두고 친타이완파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게다가 1978년 4월 무장한 중국어선이 센카쿠열도에 접근하여 시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대파는 이를 놓치지 않고 중국비판을 전개하면서 반대의 구실로 이용하였다. 이에 후쿠다 수상은 나다오 히로키치, 마치무라 긴고(町村金五), 후지오 마사유키 등 반대파 대표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설득 논리는 어떤 나라도 적대시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타국을 이용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전방위 외교'였다.[67] 결국 1978년 5월 총무회에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다. 후쿠다파 의원들이 후쿠다 수상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우려하여 할 수 없이 설득에 응한 결과였다.

3. 친중연합의 확대, 그리고 중국경사

1960년대 정계에서는 사회당, 자민당 내 보수리버럴 세력이 친중연합을 형성하면서 중일 민간무역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이 등장한 중도정당 공명당이 중일수교를 지지하였고 자민당 보수본류도 합류하였다. 국교정상화 직전 야당, 특히 사회당과 공명당의 활약은 누부셨다. 중국과 자민당 정권을 잇는 창구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이었다. 1950-60년대에 이

66) 緒方貞子(1992), p.158.
67) 緒方貞子(1992), pp.162-1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들은 미일 양국의 중국봉쇄정책, 한국전쟁 개입, 두 개의 중국정책, 베트남전쟁 개입 등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들이 펼친 국교회복운동도 중국의 대일정책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메신저 역할이었다. 특히 공명당은 1970년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측이 유사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사회당이 아니라 공명당을 의사전달 루트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측의 '중일국교회복 3원칙'과 '다케이리 메모'를 전달한 것도 공명당이었다. 평화우호조약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이후 야당, 특히 혁신야당의 존재감은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혁신야당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온 미일안보와 자위대의 존재를 중국이 너무나도 쉽사리 인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자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덩샤오핑의 발언은 혁신야당을 혼란에 빠트리기에 충분하였다.[68]

일본 경제계의 중국경사도 두드러졌다. 국교정상화를 전환점으로 우호무역과 각서무역을 축으로 한 민간무역 시대가 막을 내렸다. 과거 중일 민간무역의 당사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소무역업자 등이었다. 그러나 국교정상화를 1년 이상 앞둔 1970년 봄부터 대기업, 재계를 망라한 경제계의 중국경사가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직접적 계기는 같은 해 4월 저우언라이 수상이 제시한 '중일무역 4원칙'이었다. 타이완 및 한국과 거래하는 기업,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쟁 수행에 관여하는 일본의 제조업, 무역상사, 기업과는 무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철강업계(스미토모금속[住友金属], 가와사키제철[川崎製鉄])와 비료업계(스미토모화학[住友化学], 미쓰이토아츠[三井東圧])는 즉각 4원칙을 받아들였다. 한편 한국, 타이완과 거래해 온 대규모 종합상사(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미쓰이물산[三井物産]) 등은 신중한

68) Gerald Curtis(1979). "Domestic Politic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 William J. Barnds (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Macmillan Press, pp.58-59. 중국측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촉구한 것은 대소 전략의 일환이었다. Akira Iriye(1996). Chinese-Japanese Relations, 1945-1990." in Christopher Howe (ed.). *China and Japan: History, Trends, and Prospects*. Oxford: Clarendon Press. pp.50-51. 그 후 혁신야당의 정책선전의 중점은 기존의 "안보, 오키나와, 일중"과 같은 외교문제에서 복지, 환경과 같은 내정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山本満(1972), p.9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세를 보이다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4원칙에 동의하였다.[69] 그 후 1973년 3월 중국 측이 일본기업의 타이완 및 한국과의 무역의 현상유지를 인정하는 4원칙 완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일본기업이 중일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재계(財界)였다. 간사이(関西) 재계는 중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 그리고 국교정상화가 경제교류 확대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도쿄재계로 불리는 경제 4단체, 즉 게이단렌(経済団体連合会/経団連), 닛케이렌(日本経営者団体連盟/日経連), 도유카이(経済同友会/同友会), 그리고 닛쇼(日本商工会議所/日商)는 당초 중일무역 4원칙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미일관계의 중요성, 정부정책과의 정합성, 재계 지도자들의 성향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특히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이 도유카이였다.[70] 1971년 11월 '도쿄경제인 대표단'의 방중을 계기로 일본 경제계의 전면적인 중국경사가 시작되었다.

이들의 중국경사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청사진에 기초한 것이었고, 동시에 중국의 대일공작에 이용된 측면은 부정할 수 없었다.[71] 단, 이들이 정부에 대해 국교정상화 및 평화우호조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다. 재계는 중일경제관계에 대한 기대와 구상을 한층 심화,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타이완에 대한 온의(温意)는 온의, 정책은 정책으로 구별하여 타이완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중국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한 재계인사의 언급처럼 재계 내부에서는 이미 미중소 3대 핵보유국의 파워 게임에 대응하여 냉정하게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었다.[72] 대미관계는 안전보장, 경제 두 측면에서 현 상황을 유지

69) 이들 중에는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모회사와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중일무역에 참여하려고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添谷芳秀(1995), pp.220-224. 참고로 타이완에 진출한 일본기업 대부분은 일화협력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었다. 동 위원회는 대(対) 타이완 제1차 엔 차관(1965년, 1억 5천만 달러)과 제2차 엔 차관(1970년, 2억 5천만 달러) 공여에 첨병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당시 중국은 일화협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니테쓰(新日鉄),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도시바(東芝) 등을 중일무역에서 배제하였다. 世界編集部(1970)「日本の潮1・日中関係をめぐる政治と経済」『世界』(7月号), p.151.

70) 世界編集部(1971)「日本の潮2・日中接近と財界」『世界』(7月号), p.113.

71) 添谷芳秀(1995), p.248.

72) 世界編集部(1971), p.1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면서 수출여력을 중국, 소련 등 공산권이나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으로 돌리고 이를 위해 다른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경제계의 대중 구상을 반영한 것이 기존의 각서무역 관계자들과 통산성이 협력하여 1972년 10월에 설립한 일중경제협회(日中経済協会)였다.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교류의 창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향후의 경제협력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산성도 민간주도의 대중 무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중일무역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중일무역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일중경제협회와 중일무역을 일본의 전반적인 경제운영 속에서 파악하는 게이단렌 사이에는 적지 않은 입장차이도 존재하였다.[73] 하지만 1978년 2월의 중일장기무역협정 체결을 전후하여 일중경제협회와 게이단렌의 관계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이행하였다. 그 배경은 재계의 중일경제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석유위기라는 쓰디쓴 경험을 통해 자원전략을 경제적 안전보장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기존의 미국·유럽 중심의 수출시장구조를 바꾸어 다각적으로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한 수출주도형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그것이었다.[74] 중일장기무역협정을 주도한 이나야마 요시히로(稲山嘉寛) 신닛테츠 회장은 일중경제협회 회장은 물론 게이단렌 회장을 역임하였다.

매스컴과 국민여론의 '중국 붐'은 일본사회 전반의 중국경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고 이것이 일본으로 파급되어 국내여론이 조성되었다. 중일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엔 정부가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한 다나카 수상의 미일정상회담(하와이)에서의 언급은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다. 다나카 수상이 국교정상화를 결단한 것은 친중파를 포함한 폭넓은 여론과 재계

73) 일중각서무역사무소 대표 오카자키 가헤이타는 국교정상화 직후 산업계가 미국·서유럽과의 무역마찰을 이유로 중국시장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岡崎嘉平太(1972)「中国に賭けたわが半生の記」『中央公論』(10月号), p.99.

74) 日中経済協会(1978)『変動する国際経済と日中経済関係』日中経済協会(4月), pp.169-170. 당시 재계에는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을 파악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중국을 파트너로 선택하여 일본이 자원을 수입하고 중국에 거대 플랜트를 수출하는 식으로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에서 상호보완체제를 만들면 일본은 미일관계와 중일관계라는 두 개의 굵은 줄을 갖게 되어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秋山哲(1978)「財界の壮大な賭け: 日中貿易」『エコノミスト』(3.14), p.1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주류의 중국 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이다.[75] 1970년대에 걸쳐 중국 붐은 크게 두 차례 일었다. 첫 번째는 국교정상화를 앞둔 1972년이었다. 연초부터 총평(総評), 노동조합, 일중우호협회 등의 방중이 줄이었다. 3월에는 사회당, 공명당, 총평, 일중국교회복국민회의, 일중국교정상화국민협의회가 연합하여 성대하게 국교회복실현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일중국교회국의원연맹의 후지야마 아이이치로 회장, 사회당·공명당·민사당 각 위원장, 노동조합, 일중무역단체, 일중우호단체 대표 등이 일중국교회복촉진연락회의를 조직하였다. 일중우호협회도 8월 다나카 수상의 방중을 요구하는 6,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편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들도 조속한 국교정상화를 합창하였다. 중국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중일우호 선풍(旋風)이 일었다.[76]

〈표2〉 일본인의 대외인식 (1978-80)

국명 / 연도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친근감을 느낀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낀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낀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친근감을 느낀다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1978	62.1	25.6	72.7	19.5	11.3	74.2	40.1	45.2
1979	70.9	20.3	78.0	16.8	12.7	77.7	41.2	46.8
1980	78.6	14.7	77.2	17.7	7.9	84.4	43.1	46.9

출처: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2000)

두 번째는 평화우호조약 체결 전후였다. 친중 단체들은 미키 내각, 그리고 후쿠다 내각 시기에도 중국의 반패권 주장에 호응하면서 평화우호조약 조기 체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국제무역촉진협의회, 일중경제협회, 일중우호협회, 일중협회(1975.9 설립) 등은 1976년 2월과 10월 저우언라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대규모 추도식을 열고 반패권 조항을 명기한 조약체결을 결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77] 특히 평화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해 덩샤오핑 부수상이

75) 毛里和子(2006)『日中関係: 戦後から新時代へ』岩波書店, p.83.
76) 林代昭(1997), pp.200-201.
77) 李温民(2005), pp.173-17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78년 10월 말 일본을 방문하자 이들 단체는 합동 경축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주요 신문 사설도 평화우호조약이 "중일관계를 목조 다리에서 철조 다리로 바꾸었다", "정치체제가 상이한 나라 사이의 평화공존 모델을 제시하였다", "반패권 조항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등 호평 일색이었다. 1970년대 초의 중국 붐이 친중적 인사 및 단체에 의한 것이었다면, 금번 붐에는 그 외에도 일본경제계의 환영이 두드러졌다.[78] 200사 이상에 달하는 일본기업들이 주요 일간지에 '축하광고'를 게재할 정도였다.[79]

위와 관련하여 일본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1978년-현재)가 흥미롭다(표2). 특히 1980년 일본인들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한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마저 능가하고 있다(중국 78.6%, 미국 77.2%).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도 중국(14.7%)이 미국(17.7%)보다 낮다. 덩샤오핑의 일본방문, 중국의 팬더 한쌍 기증과 그로 인한 팬더 붐, 중국의 개혁·개방노선 시동, 일본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개시 등은 중일관계의 긴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참고로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90년대에 45% 대의 추이를 보이다가 21세기 이후에는 반중(反中)·혐중(嫌中)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었다(2010년 "친근함을 느낀다" 20.0%, "친근함을 느끼지 않는다" 77.8%).

Ⅳ. 맺는 말

결론적으로 다나카, 미키, 후쿠다 내각의 중국정책을 기본적으로 견인한 것은 중국의 대일접근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일본사회 내부의 호응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혁신야당, 자민당 보수리버럴, 중일무역업자, 노동조합 등 전통적인 친중 세력 이외에 중도야당, 자민당 보수본류, 제조업계, 재계, 새로 설립

78) 1975년 봄 평화우호조약 교섭이 정체되자 중국 측은 일본여론을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일본의 친중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민외교를 전개하였다. Chalmers Johnson(1995).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249.

79) 林代昭(1997), pp.245-25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된 단체, 매스컴 등이 폭넓은 친중 연합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운영은 타이완이 아닌 중국을 선택한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지향하였다. "일본의 적극적 대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보다 빨리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었다. 즉 국교정상화의 실현 그 자체가 자기목적화하여 국제질서의 변동은 오로지 중일국교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요인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80] 이 시기 자민당 정권이 중국정책과 관련하여 미일안보체제와 타이완조항에 그 어떤 수정을 가하고자 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기존의 '두개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중국에 적용한 정경분리를 타이완에 적용하는데 머물렀다.

이러한 현상유지적 정책운영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국제환경 요인이기보다는 국내정치적 요인이었다. 정부 내 정책결정에서는 보수본류, 보수리버럴, 보수우파를 불문하고 내각의 관료적 적응이 두드러졌다. 국교정상화로 국내의 불협화음 가운데 3분의 2가 없어질 것이라는 다나카 전수상의 인식은 시기상조로 드러났다. 역대 내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문제가 당내 권력투쟁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적극적 관여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게다가 여당 내에서는 친중파와 친타이완파가 한층 더 격렬하게 대결하는 상황이었다. 자민당 정권이 중국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가령 내각이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다할지라도-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셈이다.

단, 이 시기에 정계, 민간단체, 매스컴을 불문하고 하나의 공통분모가 출현한 점은 특기할 만 하였다. 바로 경제협력이었다. "중국의 현대화는 중국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일본으로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 측이 상담을 원한다면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 (평화우호)조약체결이 종료되면 고모토(河本) 통산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81]이라는 소노다 외상이 덩샤오핑 부수상에게 한 발언은 그 후의 중국정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

80) 添谷芳秀(1995), p.249.

81)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1993)『日中関係基本資料集 1970年-1992年』霞山会, pp.181-182. 괄호 안은 필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도가와 이사무시 엮음, 임창출판공사편집부 역(1984)『세계대통령·수상 대회고록: 다나까 가꾸에이』임창출판공사.

소에야 요시히데 엮음, 박철희·윤수경·이나올 역(2006)『일본의 미들파워 외교』오름.

손기섭(2003)「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중 국교정상화의 정치과정」『일본연구논총』제17호, pp.105-140.

손기섭(2004)「일중 정치경제 관계에서의 '72년 체제'의 발전과 전환」『일본연구논총』제19호, pp.93-128.

秋山哲(1978)「財界の壮大な賭け: 日中貿易」『エコノミスト』(3.14), pp.18-23.

石川忠雄(1975)『日中問題私見』酒井書店.

殷燕軍(1996)『中日戦争賠償問題』お茶の水書房.

殷燕軍(2006),「日中・米中国交正常化過程の比較検証：台湾問題の処理を中心に」『自然・人間・社会』第40号(1月), pp.51-87.

五百旗頭真(編)(2006)『戦後日本外交史』有斐閣アルマ.

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2003)『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井上正也(2010)『日中国交正常化の政治史』名古屋大学出版会.

上原隆(1978)「福田首相 その頼りなさの研究」『中央公論』(6月号), pp.50-57.

岡崎嘉平太(1972)「中国に賭けたわが半生の記」『中央公論』(10月号), pp.92-101.

緒方貞子(1992)『戦後日中・米中関係』東京大学出版会.

カーティス、ジェラルド(山岡清二訳)(1987)『日本型政治の本質：自民党支配の民主主義』TBSブリタニカ.

外務省アジア局中国課(監修)(1993)『日中関係基本資料集 1970年-1992年』霞山会.

加藤洋子(1992)『アメリカの世界戦略とココム 1945-1992』有信堂.

近代日本研究会(編)(1985)『年報・近代日本研究：日本外交の危機認識』(第7号) 山川出版会.

国分良成(2001)「冷戦終結後の日中関係：'1972年体制'の転換」『国際問題』第490号(1月), pp.42-56.

世界編集部(1970)「日本の潮1・日中関係をめぐる政治と経済」『世界』(7月号), pp.146-151.

世界編集部(1971)「日本の潮2・日中接近と財界」『世界』(7月号), pp.113-116.

世界編集部(1972)「日本の潮1・田中政権と日中関係」『世界』(9月号), pp.156-157.

世界編集部(1972)「記者座談会・転換期の保守外交」『世界』(11月号), pp.97-111.

世界編集部(1974)「日本の潮3・日中航空協定と台湾派の動向」『世界』(3月号), pp.205-207.

世界編集部(1978)「日本の潮4・日中条約: 福田政治の戦略」『世界』(7月号), pp.153-156.

添谷芳秀(1995)『日本外交と中国』慶応通信.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添谷芳秀(2003)「米中和解から日中国交正常化へ：錯綜する日本像」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333-351.
竹入義勝(2003)「歴史の歯車が回った流れ決めた周首相の判断」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197-211.
田中明彦(1991)『日中関係1945-1990』東京大学出版会.
田原総一朗(1978)「青嵐会 幻の反乱」『中央公論』(10月号), pp.172-186.
丹羽文生(2008)「日中航空協定締結の政策決定過程：自民党日華関係議員懇談会の影響力」『問題と研究』第37巻4号, pp.137-156.
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1992)『通商産業政策史(16) 統計・年表』通商産業調査会.
通商産業政策史編纂委員会(編)(1994)『通商産業政策史(17) 資料・索引』通商産業調査会.
寺井久美(1974)『航政研シリーズNo.68 日中航空協定交渉について』航空政策研究会(6月).
日中経済協会(1978)『変動する国際経済と日中経済関係』日中経済協会(4月).
日中経済協会(1979)『1978年米上下両院合同経済委員会報告：毛沢東以後の中国経済』日中経済協会(4月).
橋本恕(2003)「橋本恕に聞く：日中国交正常化交渉」石井明・朱建栄・添谷芳秀・林暁光(編)『日中国交正常化・日中平和友好条約締結交渉』岩波書店, pp.212-225.
早坂茂三(1987)『早坂茂三の「田中角栄」回想録』小学館.
増田卓二(1975)『実録・三木武夫：信念のクリーン宰相』ホーチキ商事株式会社出版部.
毛里和子(2006)『日中関係: 戦後から新時代へ』岩波書店.
山本満(1972)「日中復交・革新外交の次の課題」『中央公論』(12月号), pp.97-134.
若宮啓文(1995)『戦後保守のアジア観』朝日選書.
渡辺昭夫(1988)「議会と外交政策」『年報・近代日本研究：近代日本研究の検討と課題』山川出版会, pp.366-381.
李温民(2005)『日中平和友好条約交渉の政治過程』お茶の水書房.
林代昭(渡邊英雄訳)(1997)『戦後日中関係』柏書房.
呉学文·林連徳·徐之先(1995)『中日関係1945-1994』時事出版社.

Curtis, Gerald (1979) "Domestic Politics and Japanese Foreign Policy." in William J. Barnds (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The Macmillan Press, pp.21-85
Fukui, Haruhiro(1977) "Tanaka Goes to Peking: A Case Study in Foreign Policymaking." in T. J. Pempel (ed.) *Policymaking in Contemporary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84-90
Iriye, Akira(1996) Chinese-Japanese Relations, 1945-1990." in Christopher Howe (ed.),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China and Japan: History, Trends, and Prospects, Oxford: Clarendon Press. pp.46-59

Johnson, Chalmers(1995) *Japan Who Governs? The Rise of the Developmental St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Kissinger, Henry(1994) *Diplomacy*, New York: Simon & Schuster

Ogata, Sadako(1988) *Normalization with China.* Tokyo: Nihon Keizai Shinbunsha

Soeya, Yoshihide(1998) *Japan's Economic Diplomacy with China, 1945-1978,* Oxford: Clarendon Press

Tucker, Nancy Bernkopf(1996) "U.S.-Japan Relations and the Opening to China." Working Paper No.4, The National Security Archive and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Whiting, Allen S.(1989) *China Eyes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2000) http://www8.cao.go.jp/survey/h23/h23-gaiko/2-1.html(검색: 2011.11.5)

日本経済産業省(1972)『通商白書 1972年版』http://www.meti.go.jp/hakusho/index.html)(검색: 2011.11.5)

日本経済産業省(1979)『通商白書 1979年版』http://www.meti.go.jp/hakusho/index.html)(검색: 2011.11.5)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